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동행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공동행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2009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發刊辭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7월 21일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9월 10일에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고, 12월 15일에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금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켰다. 그리고 지역발전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발전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청와대에 신설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역발전 의지를 천명하였다. 금년부터는 광역경제권을 필두로 초광역개발, 기초생활권개발, 4대강 연계 지역개발, 재정분권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의 성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다. 그리고 기본방향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이다. 즉,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이 산술적 균형에서 역동적 균형으로, 중앙집권적 시혜에서 분권과 자율로, 소규모 분산투자에서 통합과 규모의 경제로, 소모·모방적 지역주의에서 생산·창조적 지역주의로 일대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현 시점에서 지역정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민관협력 모델과 우수 사례를 학습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동행』은 우선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민관협력의 지역개발 이론을 소개한 후,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 모델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연구하거나 전환된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지역현장에서 자율적이며 연계협력 방식에 의해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이 책자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 상 철

색무취한 획일적 계획으로 전락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도 정해진 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의 선순환구조의 창출이 미흡하였다.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II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패러다임 전환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참여정부는 중앙집권적 정책체계와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도는 제한적인 성과에 머무르면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방분권을 예로 들면 가장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균형발전정책도 역시 균형특화계획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중앙부처간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액·중복투자가 만연하였으며 시·도간 안배방식을 답습하였다.

자본, 노동, 정보, 금융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은 국가 주도의 자원배분체제 보다는 지역단위에서 각자 특성을 살린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Local Governance)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으로 자원배분의 규모화, 집적화를 요구하며 행정구역 내부에서도 기업-자치단체-주민-전문가 사이의 전략적 일체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은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조류에 조기대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의 근간을 재구축하는데 있다. 산술적 균형(Balance) 보다는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균형(Equilibrium)을 추구하며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분권형 시스템의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지나친 평등주의와 행정구역별 획일적인 배분을 지양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 '도토리 키재기식' 보다는 절대적인 발전역량을 고양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발전체제, ④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으로 ① 모든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② 신성장동력 발굴 및 특화발전, ③ 행정적·재정적 권한이양에 의한 지방분권 확대, ④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 주요 시책들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기조를 설정하였다.

〈그림 2〉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비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기본방향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모든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분권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자율성 제고, 지방계획·개발권 강화 등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
	기존 시책 발전·보완	혁신·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2) 전국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3차원적 국토개발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우선 열린 국토공간은 7대 (혹은 5+2) 광역경제권의 육성을 근간으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초생활권은 시·군을 기본단위로 하되, 가능하면 생활권이 동일한 인접 시·군간 권역을 설정하여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균질적인 삶의 질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초광역경제권은 남해

3.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추진

1)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개요

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화발전이 핵심이다. 권역별 특화 발전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① 권역별 핵심 선도프로젝트 추진, ② 규제 완화·폐지 등 선도프로젝트 추진기반 구축, ③ 권역에 참여하는 시·도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의체(광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며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선도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핵심기술의 공동 개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선도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용지 확대, 맞춤형 규제완화 등 기반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 5〉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



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는 소위 3위일체적 전략 즉, ①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선도산업 육성(3년간 9천억원 투자), ② 30개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투자), ③ 인력양

〈그림 7〉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전략



3) 선도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광역경제권 인력양성은 ① 거점대학 육성, ②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력양성 등 3각축으로 추진하며 이미 2009년부터 3년 시범사업으로 매년 1,000억원(광역권 거점대학 500억원, 교육역량 강화사업 500억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림 8〉 지역 인력양성 추진방향



4) 선도프로젝트 추진기반 구축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 등의 기반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협소한 우리 국토의 여건상 양질의 토지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① 개발 가용용지 확대, ② 산업단지 확대, ③ 기존 산업단지 재개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개발대상 가용용지는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주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노후화된 기존의 산업단지는 재개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여 첨단기술 산업용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기능 도입), 10개 노후항만(부산북항,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포항, 묵호 등)을 문화·관광·비즈니스기능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거나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서·남해안 8개 지역에 조선산업 용지(9,620천)를 공급하는 근본적인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일시에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특구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에 필요한 토지, 기업, 관광, 의료, 교육 등 특례 사항을 대폭 인정할 수도 있다.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이나 민간투자 촉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규제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5)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설치

하드웨어적 측면 이외에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반이 바로 광역발전위원회이다. 시·군 혹은 시·도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광역발전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발전주체들이 참여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계획과 집행의 일체화를 지향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단위의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개별 광역경제권의 비전, 추진전략, 연차별·사업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와 중앙정부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역혁신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표 3〉 선진국 대비 주요 문화시설 현황

구 분	OECD 평균(A)	'07년말 현재(B)	B/A(%)
박물관(미술관)	1관/4만명당	1관/7.7만명당(626관)	52
도서관	1관/6만명당	1관/7.9만명당(607관)	76

소득기회를 나타내는 사업체수, 종사자 등의 통계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2005년도에는 일반시와 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단위에서 총사업체수는 축소되었으며 일자리 측면에서도 2000년 6배에서 2005년에는 7배 정도로 악화되었다.

〈표 4〉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교

구 분			일반시	노농복합시	군	전 체
산업기반	총사업체수(개)	2000년	19,301	13,400	3,771	9,159
		2005년	21,891	14,883	3,683	9,972
고용기회	총사업체 종사자수(명)	2000년	87,349	62,223	14,633	40,648
		2005년	102,900	72,875	15,188	46,658

2)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

선진국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은 '경쟁력 강화'와 '통합적 개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발전정책에서 지역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발전정책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협력화·규모화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역시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인접 시·군간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며 사업의 규모화·융합화를 통하여 성과의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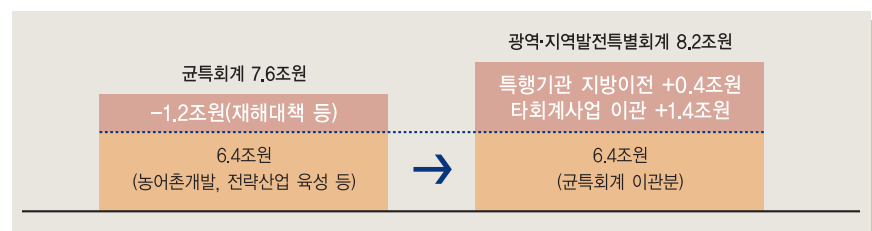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이명박 정부 신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제도적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였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8.2조원 내외로 확대된다('08년 예산기준).

〈그림 12〉 유형별 기초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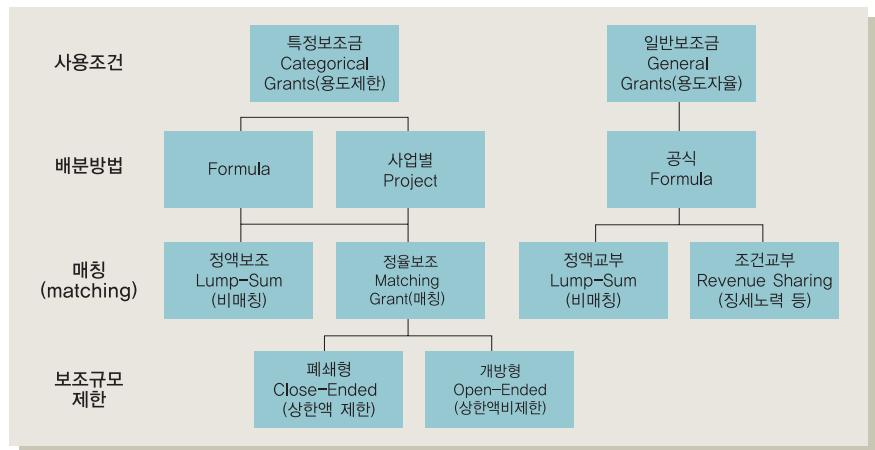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0.4조원)을 반영하며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타회계 사업 중 필요한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이관된다(1.4조원). 성장거점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 광역단위 개발사업과 같이 광역단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수한 24개 단위사업(1조 3,779억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들어온다. 반면에 재해예방 등 국가가 직접 시행

〈표 8〉 낙후지역 관련 종합개발사업 현황

부처별	사 업 명	사업비
합계	11	11,168
행정안전부	3	1,929
	소도읍육성	464
	도서종합개발	954
	접경지역지원	511
농림수산식품부	5	6,587
	농촌마을종합개발	1,263
	농어촌 정주 기반 확충사업(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3,132
	오지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	
	신활력 지역지원	1,882
국토해양부	개발촉진 지구지원	1,816
환경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608
산림청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228

이에 따라 신지역발전정책은 유사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자치체획권의 신장 등을 추진하고자 지역개발계정 전체를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용도제한의 범위, 재원의 교부기준, 지방비부담의 유무, 재원규모의 제한성 여부 등으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용도를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공식에 근거하여 교부액을 산정(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표적)하며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해당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용도를 제한한다(국고보조금이 대표적).

〈그림 13〉 지방재정조정 재원의 유형과 특성



7개 정책군 중 마지막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는 낙후지역 대상 지역개발종합사업으로 내용상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군으로 통합하였다. 5개 부처가 분산·추진한 15개 낙후지역 개발사업(1조 3,082억원)은 자치단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패키지사업 형태로 지원하며 성장촉진지역, 일반 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

- 성장촉진지역 : 경제력, 재정력, 기본인프라 등이 매우 낙후된 지역
- 특수상황지역 :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입지조건이 매우 특수한 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 일반시, 행정구가 있는 시
- 신성장거점지역 : 기타 시·군

〈표 10〉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 정책군에 포함되는 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 시·군·구	'08년 예산 (억원)	사업내용
① 행정안전부 - 접경지역 지원 - 도서지역 개발 - 소도읍 육성 -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125 15 37 36 37	2,225 511 954 464 296	- 도로, 마을회관 등 정주환경 개선 - 생산, 생활기반시설 확충 - 생활편익, 소득·문화기반시설 등 -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② 농림수산식품부 - 신활력지원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마을종합개발 - 전원마을 조성 - 어촌종합개발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468 70 243 101 39 15	6,936 1,882 3,109 1,235 103 298 309	-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 - 면단위 기초생활환경 정비 -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 생활환경 개선, 생활·소득기반 확충 - 급수취약지역 지하수 개발 등
③ 국토해양부 - 개발촉진지구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154 34 88 32	3,099 1,816 1,133 150	-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심불량주거지 내 도로, 상하수도 정비 - 시범도시·마을 인센티브
④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 조성	57 57	228 228	-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시설 등

〈표 1〉 통치와 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통치	거버넌스
추진 조직	조직형태	집중형태	분산형태
	지도층	정부 공무원	모든 이해당사자간 협상 주도자
	조직가치	전통적인 자본의 축적	사회적 자본 축적
	조직의 공동 목표	국가형성	시민사회 구축
추진 방식	권한행사방식	계층적, 일방적	모든 이해당사자간 공유
	의사결정 방식	다수결에 의한 지시와 통제	역할에 따른 다자간 협상
	정보생산능력	공공부문)민간부문	공공부문(민간부문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	소비자 혹은 의뢰인	소비자인 동시에 공동 생산자
	자원조달체계	내생적 자원투입 위주	내·외생적 자원결합

출처 : 소진광(2007), 한국지방자치학회보, p98.

NGO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 파트너로 부상함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정부개혁의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유형¹⁾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널리 응용되었다. 복잡성, 역동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어떤 부문도 조직적·제도적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과 부문을 가로지르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Kooiman, 1993: 35).

NGO와 지방정부는 비영리·공익분야를 담당하고, 사회적·공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목표도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NGO와 지방정부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질 수 있다(石川縣, 2002: 5).²⁾

참여적 거버넌스로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사례

- LEADER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EU 회원국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환경보존이나 토지관리 및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문제 등의 사업에 지원되었다.
-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요소
 - ① 인구 1만 명~10만 명 이내
 - ②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커뮤니티
 - ③ 동질적이고 응집성이 강한 지역
 - ④ 전통과 정체성의 공유
 - ⑤ 수요와 기대를 공유
 - ⑥ 응집성과 결집력
 - ⑦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는 불필요

〈그림 1〉 EU LEADER 프로그램 개요



자료 : EC(2006).

(2) 추진주체 -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

• 구성

LEADER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조직은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으로 지역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LEADER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LAG는 민·관 파트너를 아우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이해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기업, 시민이나 시민단체, 지역정치단체, 환경단체,

문화 및 봉사, 미디어 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등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포함해 균형을 맞췄다. 이들은 조직 활동과 운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현장정보를 수집하는 애니메이터(animator)들로 역할을 분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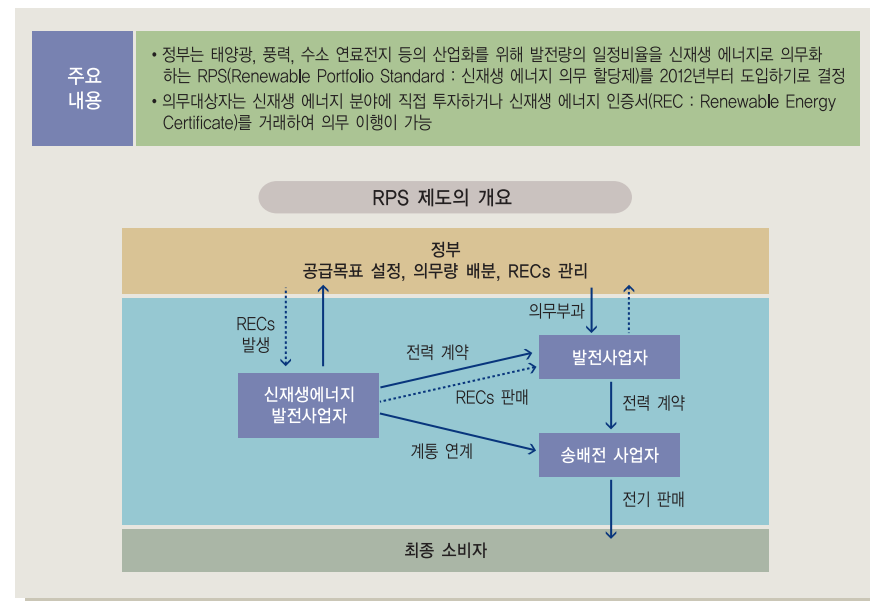
- 시민, 주민, 지역 관련

- 중동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는 산업용 공조기기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의무대상자를 위한 RECs(재생에너지증권) 구매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 초기 시장안정화를 위해 RECs의 자유 거래가 제한되었지만,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조달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이 이뤄질 것이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중앙집중식 발전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우수한 시설 장비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안정적 전력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을 모니터링하고 소규모 전력 시설의 송배전 및 전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신규 건물의 경우 전기·가스 이외에 지열·풍열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조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에 따라 산업용 공조기기 시장이 20~3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8〉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출처 : 냉동공조 2008년 12월호, 한국냉동공조협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4.

이 글에서는 지역간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범적인 사례(Ⅱ장과 Ⅲ장에
서 구체적인 국내외 제도와 사례 검토)를 제시하여 지역간 협력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살
펴보도록 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Ⅱ	해외사례

1.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제도

1) 개요

유럽연합(EU)은 1988년 이전까지 각종 정책과 함께 지역정책의 수행체계를 고민하다가, 지
역정책의 재원인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운영지침인 리스본 전략을 마련하면서 EU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역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EU의 지역
정책은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회원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경제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가간, 행정구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하나
의 유럽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간 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이 국경간,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하고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
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Interreg Community Initiative(이하 Interreg)이다. 먼저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지역정책에서 Interreg 프로그램이 갖는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주요내용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1975년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고, 1988년 전후에야 지역정책의 원칙과 위상이 정립되기 시
작하였다(박경 외, 2008). 그 이후 유럽 전체 차원의 지역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대규
모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³⁾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이사회의 모
임에서 채택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계기로 EU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리스본전략과 구조기금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지역발전정
책을 수립하게 된 유럽연합은 현재까지 제1차 계획(2000~2006)을 수립·완료하였으며, 최

Footnote

³⁾ 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이하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이하 ESF), 결속기금(Cohesion Fund: 이하 CF)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금에 따라 사용목적이 구분되어 있다.

